

한라포커스 제주도 재정 위기 안정화 방안 없나(상)

정부 지원·지방세입 줄며 道재정 '비상'

올해 균특예산 대부분 증가... 제주만 8.6% 감소
 정부 지원사업비는 51.4%로 전국 최하위권 기록
 제주 이전 특행기관 신규사업 추진 외면도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도 감소하고 있어 SOC 투자와 환경시설 확충, 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평균 2.6% 증가한 반면 제주는 8.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계정(본예산 기준)은 지난해보다 9.7% 감소했으나 세중시계정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균특예산 증감율을 보면 충북이 7.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강원도 7.0%, 전남 6.6%, 경남 5.6%, 충남 5.3%, 경북 0.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0.9%를 기록했다.

또 2020년 예산안 대비 중앙정부 지원사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51.4%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남이 66.8%로 가장 높았고, 전북 65.7%, 강원 64.6%, 경북 61.2% 순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은 2007년 전체 균특예산의 5.12%를 차지했지만 2021년엔 2.32%로 줄어 들었다. 균특 총액 대비 제주계정 비중의 하락 요인을 구성항목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금)이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특별행정기관의 예산비중 하락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847억원이었던 특별행정기관 예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329억원으로 무려 28%나 감소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로 이전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도관리청·제주지방해양수산청·제주지방중소기업청·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환경출장소·제주보훈지청 등 7개이다.

특별행정기관의 인건비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증가, 기본경비는 4% 증가했으나 사업비는 오히려 1.4% 감소했다. 특별기관

들이 지속사업 종료 후 신규사업을 제때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은 "특별자치도 초기 제주계정 비중은 5.1%, 특행기관은 2.1%였는데 현재는 각각 2%대, 1%대로 감소해 누적 격차액이 각각 1조 7000억원, 39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 함덕해수욕장 풍경. 초여름 날씨처럼 기온이 치솟은 1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많은 도민·관광객들이 해변을 거닐거나 물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상국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닷새 만에 한 자릿수

12~13일 11명 추가 확진... 경찰 확진자도 추가

4차 대유행 속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산세가 닷새 만에 한자릿수로 돌아서면서 다소 누그러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촉에 의한 감염에 더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9명(제주 830-838번), 13일 2명(839-840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

날 밝혔다.

이들 세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84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선 지난 8일부터 나올 연속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보였으나, 닷새 만에 한자릿수를 나타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자발적 검

사가 이어지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2000건을 넘어서 역대 수치를 기록했지만, 진단검사 수치에도 불구하고 확산 추이는 다소 진정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최근 타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도민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연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 신규 확진자 중 72.9%인 90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2면에 계속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 도의회TF, '제주특별법 개정안' 과제 9건 확정

제주도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가 도입되고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도의회 TF'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과제 9건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과제 내용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원 입법을 통해 연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 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탄생한 행정시의 행정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를 담았다.

또 도민사회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등을 삭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배분 기준이 지속 변경되면서 제주

계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를 균특회계 총액의 3% 정률제로 명시했다. 제주계정은 2007년 5.12%(3476억원)에서 2021년 2.32%(2403억원)로 감소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7개)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국비 지원예산이 줄고 도민 월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특행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담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7년 이후 2007년 비중 2.03% 적용시 4255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지방비)는 2007년 이후 8675억원이 증가했다.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 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국유재산에 알뜨르 비행장 일원을 포함시켰다.

또 각종 특구 관련 법률의 사업을 제주에 유치·적용하고, 전기차 특구, 분산에너지 특구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소관 법률에 따른 사업을 적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대로기자

제주 코로나19 13일 18시 기준 확진 840(11)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뉴스를 활용한 인성교육 알림

"학교를 찾아가입니다"

- ▶사업 명: 2021 뉴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인성교육
- ▶사업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7곳
- ▶사업 형태: 특강·NIE 체험 (1곳당 1학급(또는 동아리)이상, 각 연속 2시간)
- ▶사업 기간: 2021년 5월 31일-12월 16일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선착순
 한라일보 홈페이지(http://www.ihalla.com)
 좌측 배너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ejoh@ihalla.com)로 전송
- ▶문의 의: 010-2024-5692(NIE 담당 기자)

간접·회계·재무·인사·마케팅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